

# 한국일보

**쫄세일**  
703.625.2232  
에디 오, 프라임 부동산



워싱턴 로펌  
대/표/변/호/사  
**전종준**  
(703)914-1155  
한국 최초 미 이민법 저자



imes.com

The Korea Times

대표전화 (703) 941-8001

2010년 9월 25일 토요일

## “중국, 탈북자 복송 중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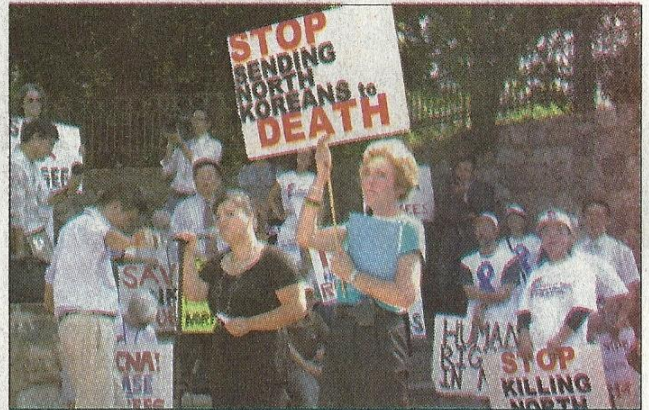
### 북한자유연합,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서 시위

북한자유연합(의장 수잔 솔티)이 24일 워싱턴DC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들의 인권 보장, 강제 복송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디펜스 포럼, 탈북자선교회(단장 마영애), 한미자유연맹(총재 유흥주) 등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고발하고 중국정부와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희문 목사(하나교회)의 지도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수잔 솔티 의장의 경과보고, 탈북 여성 강수진, 조진혜, 박미선씨의 중국내 인권 실상 고발과 증언, 중국내 탈북자들의 명단 낭독, 피켓 시위 순으로 진행됐다.

탈북여성 인권연대 대표로 활동중인 강수진씨는 “중국내 탈북 여성의 90% 이상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고 중국인과 결



북한자유연합이 24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탈북여성 조진혜씨가 탈북자 복송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혼한 탈북 여성 사이에 난 아이들은 불법 이민자로 간주돼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강 씨는 이어 “중국은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 중국간의 불법 이민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UN 등 국제 사회의 개입을 거부하

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탈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 철폐,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에 대한 임시 거주권 부여, 이들 사이에 난 자녀들의 합법적 취학 등을 촉구했다.

<박광덕 기자·4면으로 계속>

1면서 계속

### 탈북자 시위

2008년 미국에 정착한 조진혜 씨는 “얼마 전 워싱턴에서 억울

한 일을 당했으나 경찰국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했다”며 “하지만 중국내 탈북자들은 억울해도 갈 데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중국은 탈북자들이

살인도, 도둑질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잡으면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느냐”면서 “김정일이 나쁜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데 왜 중국만 유독 북한을 감싸고 도느냐”고 울먹이며 대사관 건물을 향해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탈북자들의 명단을 낭독한 후 ‘중국은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하라’, ‘탈북자 복송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 “중국은 탈북자 난민으로 간주해야”

“탈북여성 90% 中서 강제 인신매매”...오늘 DC 중국대사관앞 시위

하원 인권위원회는 23일 워싱턴 DC 하원 레이번 청사에서 북한 인권단체 대표와 탈북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탈북자 현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단체 ‘318 파트너즈’ 스티브 김 대표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수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 매춘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포르노업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선족들이 운영하는 사이버 포르노업은 아파트의 한 방에 4~6명의 탈북여성들을 가둬놓고 웹카메라 앞에서 ‘성적’ 서비스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는 여성들은 1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이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탈북여성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이 여성들을 불법 외국인 체류자나 경제적 이민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간주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인신매매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이 북한 송환의 두려움이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 난민지위 인정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중국 당국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이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2년 탈북한 강수진 탈북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중

국도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난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중국은 탈북난민을 불법 외국인 체류자로 간주하고, 또 북-중간 문제이지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 멤버들은 중국이 선진국에 걸맞은 인권 정책을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인권단체인 디펜스 포럼(대표 수전 솔티), ‘318 파트너즈’, ‘탈북여성인권대표’ 등 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은 24일 워싱턴 D.C 중국대사관앞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